

송갑석, 민주 지도부 진입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광주 지역구 출신 송갑석 의원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과연 5위 안에 들 수 있을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22일 그동안 함께 경쟁을 펼쳤던 전북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전격 사퇴하면서 '송갑석 지지'를 선언해 친문(친문재인), 친낙(친이낙연) 계열 수도권 권리당원·대의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막바지 변수로 떠올랐다.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호남의 지지 덕분에 3·4·5위 후보들과 불과 1%포인트(p) 안팎의 격차로 줄어들었다"며 "호남 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과 대의원에게 전해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1일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송 후보는 광주에서는 22.27%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23.0%)에 이어 2위, 전남에서는 14.55%로 고민정·정청래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송 후보는 호남권 경선 전까지 7위에 그쳤으나 6위로 상승해 3·5위 후보들과 1%p 안팎으로 격차를 줄였다. 특히 당선권인 5위 박찬대 후보와 차이는 0.38%p에 불과했다.

그는 "저에게 쏟아진 호남 당원들의 지지가 단순히 송갑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남 당원들이 송갑석에게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정신을 불어 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3-5위 후보와 격차 1%p 안팎으로 줄어들어 윤영찬 전격 후보 사퇴 선언 "송갑석 지지" 수도권 경선 앞두고 '친문·친낙' 결집 전망

를 단호히 거부한다.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명예롭게 당당하게 걸겠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대의명분의 길을 걸겠다. 대세가 아닌 민심의 길을 걸겠다"는 호남 유세 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송 후보는 "호남은 차별과 배제의 역

사를 묵묵히 감내하며 그 아픔을 대의명분과 시대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치유하고 승화해왔다"며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남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 당원들과 대의원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남은 일주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윤영찬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도 오는 27일로 예정된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친문·친낙계 권리당원·대의원들의 표

분산을 막는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대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수도권 후보로 유일하게, 곳곳에 균형발전을 외쳐 온 송갑석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전국 곳곳에 국민에게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송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것은 현재까지 총 15곳에서 치러진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전날까지 총 6.63%의 득표율을 보여 8명의 후보 중 7위를 기록, 당선권인 5위에 들지 못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살아있는 권력 수사...尹정부 檢도 전통 이어야"

이상호, 대통령실 인적 개편엔 "측근 보강, 영동한 처방"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등이 이뤄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에 더욱 골몰하고 있다"며 "(탈북어민 강제 복송 사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

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음에도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아직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 확보를 못 했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쪽으로 기조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정부 들어서서 일관되게 권력기관 장악에 너무 몰두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정치보복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현실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권력 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는 정권을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을 경고하면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또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거론하며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낼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결국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김은혜 홍보수석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며 "말썰지게 일 잘하던 최영범 수석을 김은혜 수석을 다시 기용하기 위해서 내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영동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진단이 잘못돼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가법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클리

윤재갑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2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품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품얼음 모두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

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보관 중 냉동고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제품이 녹았다 얼었다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병과업계에서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 커피·생과일주스 등에서 사용되는 식품얼음도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유



통·보관 문제로 인해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의 요구가 잇따라 왔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김희재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은 22일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사를 받는 기관·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찰 권한 남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정책 목

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밖에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경우 직전의 회계감사·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이후 1년 만에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급 기관은 보통 3



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는데 1년 만의 재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재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찍어내기' 주무부처가 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전남 주택연금 수령액 서울의 1/3 수준

송석준 "지역 간 주택연금 격차 줄여야"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받는 전남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서울의 1/3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월평균 160만7천원이었다.

2017년 100만2천원이었던 월 평균 수령액은 2018년 106만4천원, 2019년 107만4천원, 2020년 120만6천원, 지난해 151만3천원을 기록해 꾸준히 상승했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가격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주택연금의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 월 수령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133만8천원)로, 가장 적었던 전남(50만원)의 2.7배였다. 올해 들어서도 월 수령액 최다·최소 지역은 각각 서울과 전남으로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은 211만3천원, 전남은 69만2천원을 기록해 양 지역 간 월 수령액 격차는 3.1배로 더 커졌다.

송 의원은 "잘못된 주택정책의 여파로 커진 지역 간 주택연금 격차를 줄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